를상 이익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7.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강학상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선인의 결정	ㄴ. 행정심판재결
ㄷ. 영수증 교부	ㄹ. 특허의 등록

- ① ㄱ-확인 ② ㄴ-공증
- ③ ㄷ-통지 ④ ㄹ-수리

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없다.
-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9.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 ④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10. 전통적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②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 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업자는 동종의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④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 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 ④ 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을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12.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에 디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 ① ㉠ - 신뢰보호의 원칙 ② ㉡ - 상대방
- ③ ㉢ - 법률에 의한 구속 ④ ㉣ - 대외적인 구속력

13.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③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 ④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14.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골프 목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 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
- ③ 항고소송
- ④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15.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안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 병원설립 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의료취약지인 B군(郡)에서 병원을 설립·운용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기해 일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거부당하였다.

검토의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사안 : 건축주 甲은 건축사 乙에게 건축설계와 신청행위를 의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철거명령을 받

게 되었다.

검토의견 : 甲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乙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

- ④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검토의견 : 甲은 위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16.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 ②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 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③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dIT다.

17. 행정행위에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 ①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 ② 해제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 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 행위 철회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허가청으로부터 B간판에 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다. 설치기간은 2011.3.1부터 2013.2.28.까지로 하였다. A는

201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총평 및 해설] - 황남기교수

[총 평]

지문이 장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제포인트였다. 장문에 당황하거나 겁을 먹었다면 문제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분야별로는 판례(11문제), 법령(6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론은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판례를 사례화시킨 형태가 3문제 출제되었다. 최근, 젊은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다보니 사례형 문제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출제 경향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를 사례형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사례형 공부는 기본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적용, 운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판례를 기본이론에 따라 이해하려는 공부자세가 필요하다. 이론과 판례의 접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긴 문장으로 구성된 문제를 자주 접해보아야 한다. 시간 내 문제를 풀면서도 실수를 안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으니, 평소 연습을 통해 긴 문장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재책형 10번은 법 조항을 문제에 넣어서 출제했어야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등록)으로 나뉜다. 법 제20조의 신고와 법 제11조를 문제에 넣어주어야 온전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수험생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 설]

1. 정답 ②

통고처분이란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상의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답 ③

① [○] 허가 이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사후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② [○]

③ [×]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90.9.11. 90누1786).

④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2004.11.26. 2003두10251·10268).

3. 정답 ④

① [○]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84.9.25. 84누201).

③ [○] 과징금 중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부수적으로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것도 있다. 따라서 과징금의 부과와 행정벌의 부과는 병과할 수 있다.

④ [×] 위법건축물을 시정하기 위해 수도,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수도, 전기 공급거부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69조 제2항은 삭제되었다.

4. 정답 ④

①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 집행정지의 효력은 장래효이다.

③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 가처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없다.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가처분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2.7.6. 92마54).

5. 정답 ①

① [×] 행정의 효율성은 법치행정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예견 가능성은 법치행정의 목적이 된다.

② [○]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5. 96다31307).

③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 ④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6. 정답 ④

- ① [○]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령 뿐 아니라 관련법령에서도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위 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에게 위 변경승인처분과 그 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각 하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1.7.27. 99두2970).
- ②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판 1992.9.22. 91누13212).
- ③ [○]
- ④ [×] 수익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힘들다. 수익적 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 기존 업자인 경업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7. 정답 ①

- ㄱ. 당선인 결정 : 확인
- ㄴ. 행정심판 재결 : 확인
- ㄷ. 영수증 교부 : 공증
- ㄹ. 특허의 등록 : 확인

8. 정답 ①

-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 ② [○]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2.26. 99다35300)
- ③ [○] 사권설을 취하는 것이 주류 판례이나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을 상실한 자의 보상금 등은

공권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한다. (2001.6.29. 99다56468)

- ④ [○]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1998. 12. 24. 89헌마214)

9. 정답 ③(가답안) → 수정답안 : ①,③

- ① 종래 전통적으로 대륙법계는 행정국가적 체도를 특징으로 했다. 즉, 독일과 프랑스 모두 행정재판소를 행정부 관할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본기본법(1949) 부터는 행정법원을 사법부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헌법 제 9장(92조~104조)은 사법(司法)에 관한 장이다. 9장 내에 있는 제95조는 연방행정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가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는 프랑스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에서는 옳은 지문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헌법 하에서는 옳지 않은 지문이다. 따라서 ①도 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③ [×] 영미계에서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으나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한다.

10. 정답 ③

- ① [○]
- ② [○]
- ③ [×] 특허의 경우 영업자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나 허가의 경우 영업자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 ④ [○]

11. 정답 ④

- ①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성을 긍정하고 시행규칙인 부령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 ②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고시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은 위 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대판 2000.9.29. 98두12772).
- ③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을 가진다.
- ④ [○]

12. 정답 ③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행정규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게 된다(헌재 1990.9.3. 90헌마13).

- ㉠ 신뢰보호 원칙
- ㉡ 상대방
- ㉢ 자기구속
- ㉣ 대외적 효력

13. 정답 ㉢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 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정답 ㉣

㉣ 선거소송, 국민투표무효확인소송, 주민투표무효확인소송, 주민소송 등은 민중소송이다.

15. 정답 ㉠

- ① [×] 보건복지부장관은 강원도 홍천군 등을 의료취약지로 정하면서 이들 지역에 병원을 설립한 자에게는 5년간 국세와 지방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강원도지사는 지방세 면세 지시를 해당군수에게 하였다. A는 이를 믿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의료개설허가를 받아 병원건물을 신축했다. 홍천군수는 A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였다. 홍천군수의 과세처분은 A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가? ▶ 그렇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는 공적견해표명으로서,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었다.
 - ② A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 ③ A는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등 개인적 처분을 하였다.
 - ④ A의 병원신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것이다.
 - ⑤ 홍천군수의 과세처분은 선행조치에 반한다.
 - ⑥ A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6.11.23. 95누 13746).
- ② [○] A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진안군수는 이 사건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폐기물사업적정통보를 했다. 그 후 A는 이 사건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했으나, 진안군수는 신청을 거부하였다. 폐기물사업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가? 신뢰보호위반인가? ▶ 아니다. 폐기물사업적정통보는 폐기물 수급에 따라 사업적정성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폐기물사업적정통보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A의 신뢰보호위반이 아니다(대판 2005.4.28. 2004두8828).
- ③ [○]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2.11.8. 2001두1512).

- ④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대판 1998.5.8. 98두406).

16. 정답 ②

- ①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없다.

- ②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③ [○]

- ④ [○]

17. 정답 ①

- ① [○] 전통적 견해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구별해 전자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후자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

- ② [×] 부담인 부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제조건은 독립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 본체인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7.5.30. 97누262).

- ④ [×] 철회권 유보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철회로 인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위반 주장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18. 정답 ②

- ① [×] 갱신기간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갱신경과후에는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 갱신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 ③ [×]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 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10. 94누11866).

④ [X] 간판규격이 법령에 정한 규격에 초과하므로 허가거부는 적법하다.

19. 정답 ②

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X] 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3.11. 2001두6425).

③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O]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20. 정답 ②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